

보도자료		 <small>The Media Network for Justice</small>	
보도요청: 2019.10.22.(화) 배포 즉시			
담당	유 은 실, 이 석 우		
연락처	(02) 741-7662 010-3939-0082		FAX (02) 741-7663
E-mail	mirifica@naver.com		

[미디어연대 성명 2019.10.22.]

“KBS의 총체적 추락, 양승동 사장 즉각 사퇴후 재건 나서야”
“KBS 주요 프로그램 전수 조사 결과, 정권 편향성 확인”
“남북축구 중계방송 취소및 계약 경위 밝히고,
KBS성희룡 유시민 등 즉각 고발하라”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다.

국민의 방송은 아예 아니다.

특정 진영의 방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동 사장과 그 휘하 수뇌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평양에서의 남북축구 중계방송 취소는 공영방송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다. 국민과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자 김경록씨 인터뷰 왜곡 논란과 성희룡 물의를 빚은 친 정권 유시민씨 옹호는 그 연장선에서 빚어진 추락한 공영방송의 처참한 모습이며,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양승동 사장의 책임을 물을 정도였다.

미디어연대는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KBS 주요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전수 조사했고 성명과 함께 발표한다.

간판 프로그램인 저녁 9시 뉴스 ‘KBS 뉴스9’은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촉발된 광장집회를 보도하는 가운데 총 13건 가운데 9건을 조국 옹호 집회로 편성했고, 반대집회

보도는 2건에 불과했다. 찬반 집회 동시 보도 역시 2건에 그쳤다.

반대 집회 중 하나가 최대 규모의 10월 3일 집회였다. 그런데 그나마 보도순서를 17번째로 뒤로 밀어버렸다.

9건의 조국 옹호 집회는 대부분 톱기사였고 일부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보도였다.

조국 반대 집회의 다른 하나(10월5일)는 조국 옹호 집회를 현장중계 형식으로 자세히 보도한 뒤에 구색 맞추기로 간단한 세문장 보도로 처리했다.

저녁 9시 뉴스에 바로 이어지는 일요일 밤의 시사프로그램 ‘저널리즘토크쇼’는 10월 20일까지 10회 방송분의 주제 30개중(홈페이지 게재 기준) ‘조국 의혹 보도 언론에 대한 비판’이 18개나 됐다.

같은 맥락의 조국 옹호 언론(MBC) 긍정평가가 1개, 안보우려 등의 보수언론(조선일보) 비판 4개, 자유한국당(의원) 비판 3개였고, 도쿄올림픽 보이콧 찬성 2개, 일반사회 현상 주제 3개로 각각 나타났다.

조국 의혹에 대한 방송은 전혀 없이 옹호 방송 일색이었고, 현 정권이 도외시하는 안보 우려나 한일관계 정상화 필요성도 아예 다루지 않았으며 야당만 비판했다.

MBC 관련 평가란 9월 28일 조국옹호·검찰개혁 서초동 집회를 드론 촬영까지 하며 중계한 것이 잘한 것이란 얘기다. 오히려 이는 KBS 방송강령의 총강4항(공정성,객관성)과 34항(인원수 추계,카메라 조작의 신중성)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10월 20일 방송분도 ‘조국 논란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이란 주제를 걸어 놓고는 진보정권 때 임명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일방 초청해 검찰개혁과 언론의 상호 비판만을 강조했다. 고정 패널들은 모두 특정 진영만 옹호하는 인물들이다.

라디오 대표채널인 KBS-1R의 저녁종합뉴스 직후 방송되는 ‘열린 토론’도 총 49회 방송 주제 가운데 검찰개혁이 12회, 친여 성격이 8회 등 절반에 가까운 주제가 친정권·조국 옹호였고 야권 시각을 대변하는 주제는 전혀 없었다.

정치 주제는 11회였으나 사회자 자체가 ‘저널리즘토크쇼’에도 고정출연하는 친정권 시각이어서 편향성이 계속 노출된다.

이어 반일 주제가 4회, 안보(외교) 3회였으나 정권의 친북 일변도 시각의 방송이었고, 경제민생 주제는 4회뿐이었다. 나머지 8회가 사회일반주제였다.

‘열린토론’은 조국 옹호 일선에 섰던 유시민씨 사회의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 발언이 나와 사회적 공개사과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인물토론의 주인공으로 모셔 칭송발언도 하는 등(10월 17일) 사회적 책임성 결여 및 정치중립성 위반의 결정적 모습을 드러냈다.

KBS는 문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2019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회로부터 총 54건에 달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공영방송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가 친 정권 인사 다수로 구성돼 편향적 조치를 취하는 데도 이런 상황이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는 정정·반론보도 56건을 포함해 126건이나 되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KBS 양승동 사장은 자사인 KBS 여기자가 유시민씨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 당한 사건인데도 아직 고발했다는 소식이 없다.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바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무엇을 미적대고 있는가.

남북 축구의 평양경기 (녹화)방송은 남북관계의 정확한 실상 뿐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위협받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생명과 국가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KBS의 책임은 중차대하다.

화질이 좋지 않다는 양 사장의 변명은 이런 경우엔 전혀 논외다.

중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계약금(수억원 추정)을 먼저 준 경위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여당 국회의원들 마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씨가 KBS에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인터뷰 유출 의혹' 까지를 포함해 양승동 사장에 대해 "명백한 왜곡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내부 구성원을 조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최근 몇 달간 논란에 대해 KBS 대응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질타하면서 책임을 물었다.

KBS의 이런 총체적 추락상에 대해 무능과 정치적 편향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양승동 사장은 더 늦기 전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 사장을 선임하고 KBS 구성원들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명실상부한 공영방송 재건에 나서야 한다.

제2의 조국 사태가 KBS에서도 임박했음을 정권은 통렬히 각성해야 한다.

2019년 10월 22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이석우 조맹기 황우섭)